

5년 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등 4대전략 추진

정부,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
美-中 관세전쟁 격화 가능성에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 대비책



왼쪽부터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뉴시스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

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간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십(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시작에 힘을 더하다

한화손해보험

Playlist

혈당 다이어트 식단

슬로우모닝
하루 15분 명상
반려 식물 키우기
눈뜨면 레몬수 한잔
충분한 수면

Play the 좋은 루틴
그리고 좋은 보험 하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관세 대응’ 에너지협력 강화 美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산업·에너지 협력 활성화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에너지 분야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에너지 협력을 주목하고 이에 적극 활용할 태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이날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비롯한 한-알래스카, 한-미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향후 알래스카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알래스카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지역에서 LNG, 석유 생산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사업 파트너로 언급한 일본이 지난달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대만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 석유기업 대만중유공사는 최근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LNG 구매·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날 한국을 방문한 것도 알래스카 개발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날 안덕근 장관 면담에 이어 방한 기간 중 SK, 포스코, 한화, 세아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을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안덕근 장관은 장관급 회담에서 LNG,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한미 장관급 정책 대화, 민간이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